

(I)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초·중학교 편성·운영 중점에 대한 토론

강 현 석 경북대학교 교수

우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김경자 교수님 이하 연구진 일동에 존경을 표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한다. 본 토론에서는 이 발표문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보탠 후에, 본 개정 사업의 기초 연구인 ‘학교 현장, 국가사회의 요구사항 조사연구’의 책임자로서 몇 가지 내용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만, 올해 9월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최종 고시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개정 작업에 혼선을 주는 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1.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배경과 개발 지향점’에 대하여

본 발표문에 제시된 배경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제시된 4가지 배경 외에도 현 정부 국정 과제와의 관련성,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력 사항 등등이 제시되면 좋겠으며, 지향점에서는 숙의와 협의의 원칙이나 과정에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원칙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쟁점과 갈등들이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시안 개발자들의 강령(platform)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내지 근거로 내세우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했는지, 표면적 요구는 이렇게 도출되었는데, 교육적(교육과정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해석을 연구진이 하였는지가 제시되면 좋겠다. 국가, 사회적 요구에서의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용어는 교육의 맥락에서는 생경하고 어설피기까지 하다. 현장 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 상당한 반감을 얻을 수 있었다. 창의는 좋으며, 융합은 대학원 교육에서의 인재양성 방향이라고 한다.

학습자 요구와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들은 3차 개정 시에 강조했던 바와 다소간 유사하다. 교과 전문가의 견해와 관련된 내용들도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보다는 수업의 문제로 해결될 사안

들로 보인다. 교과에 대한 요구는 과연 일반 대중의 설문조사로 가능한 것일까? 현행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대입 수능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선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불행하게도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2013년의 대입전형간소화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사실인 만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의 연계성이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여러 조사에서도 특히 고교의 경우는 수능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개정 시안과 고교 편제의 운영에서 이 점이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이 ‘고교’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유·초·중에서도 당초의 취지인 문·이과 통합형 정신이 잘 스며들도록 일관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물론 명칭을 시안 개발 총괄 연구에서 ‘문·이과 통합형’에서 ‘2015 개정’으로 제안하고 있음. 이 역시 현장에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7차 교육과정으로의 회귀, 고교 과목만 조금 바꾸면 될 것을 왜 이리 전반적 개정을 해서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가, 안전 교과 신설하고, SW과목 신설하는 게 문·이과 통합형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빅 아이디어와 주요 개념 중심의 각론 개발은 과거에는 안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국가 기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수업상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등등의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2.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들(핵심 역량, 학습량 적정화, 내용-교수-평가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개념들이 새로운 것인가? 개정 시 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개정과의 차별성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각론 개발과 교과서 개발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핵심 역량이 차지하는 위상 내지 성격이 본 개정에서는 능력 혹은 목표의 성격이 강하다. 제시된 역량의 개념에 비추어서 말하면 역량은 결국 전이능력(transfer, 소극적으로 보면 적용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에서도 가장 고차적인 능력으로 전이능력을 제안하고 있다(지식과 기능의 습득 → 의미 형성(이해와 본질적 질문) → 전이능력). 그리고 일반적 역량과 교과 특수적 역량의 이원론적 구분에 대해서 의문이다. 인간의 사고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기에는 일반과 특수로 구분하다가 이제는 영역 특정적 사고에 주목하고 있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에서 가정하는 이원론은 각론 개발의 큰 논리로 작용하고 있을 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내용 진술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 개발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작업이 과연 얼마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가 의문이다. 문서에만 제시하는 반쪽 용어만으로는 곤란하다.

학습량 적정화 문제도 과거 단골 메뉴이다. 과거 개정과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르고 ‘질적 적정화’라 하더라도 교과서 작업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허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각론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내용-교수-평가의 일관성에서 강조점은 방향은 모든 학생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모든 학생을 과연 창의융합형 인재로 기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의 수월성과 평등 문제에서 브루너가 일찍이 말했듯이 수월성(excellence)은 통념과 다르게 모든 학생들을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들 각자의 관심과 흥미,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는 수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내용-교수-평가의 일관성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3자의 일관성이 교시수업의 탄력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행평가의 강조는 항상 옳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과별 내용기준, 성취기준, 평가기준, 수행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목적-기준(내용기준, 수행기준, 지역기준, 교과와 학년별 기준 등)-목표(학습성과, 수업목표 등)-학습목표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 교사교육에 대해서 교사양성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문서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상징적 의미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 총론 문서는 형식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다. 형식의 경우는 외국에서는 도식적으로 그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연구진이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현 단계로 보면 크고도 중요한 큰 차이가 없으며, 그야말로 문·이과 통합형 정신에 맞게 구현, 표현되어야 한다. 이 점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아닐 바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나아가서 편제표에 제시하는 것이 개정 취지를 살리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III의 2. 교수·학습, 3. 평가는 각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5. 역시 교육과정 중점에서 강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론에서의 상세 규정은 이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총론 문서에 각론 개발과 교과서 개발 방향이 제시될 수는 없는지?

4.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하여

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진술

기존 개정안과 크게 다른 점이며,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몇 가지 쟁점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 6가지 일반 역량의 타당성 문제인데, 물론 많은 선행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며, 이 점이 검증될 필요가 있는데, 심리적 구인이 아닌 이상,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 과연 그 방식 외에는 없는 것인지? 외국에서 만든 것들은 인간 삶의 맥락에서 만든 것들이므로 학교교육의 맥락, 특히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상을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가? 이는 위험한 작업임. 각론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법 진술 문장은 어디에?

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목표와의 관련성을 표로 제시한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상이 학교 급별 목표에 비추어 progress가 잘 표현되고 있는가? 혹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진전, 향상의 흐름이 과연 문서로 표현 가능한가?

다. 교육과정의 중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6가지 중점 사항이 층위가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6가지 사항이 공히 학습량 적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 학교 급별 공통 사항

이전 교육과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논란은 있지만, 교과군 재분류, 학년군 설정, 집중이수, 인성 교육 명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정책적으로 강조할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두 개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외에도 추가할 내용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바.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안)

2015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중에서 범교과 관련 요구조사 보고서(강현석 외, 2014)에 따르면 15개 주제로 제안을 한 바 있다. 본 발표문에는 10개의 대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총괄) 연구보고서(김경자 외, 2014)에서는 17개로 제안한 바 있다. 주제 수가 변경된 과정이 궁금하다. 그리고 총론 문서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에 대한 성취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고, 편제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신설교과 언급, 통합교과 운영 관련 지침이 중요할 수도 있다.

(II)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토론

발표문 앞 부분에서 제시한 고등학교의 이중적 성격과 상반된 기대,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온 문제와 개선책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적 문제로 풀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권력의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그리고 거칠게 표현하면, 직접적 단초로 수능개선과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발표자도 다소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들이 2015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하고 구현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 2015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는 지가 의문스럽다. 이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편제를 바꾸고, 문서 체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이기 보다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소통하고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일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하드웨어(편제와 시간 배당, 문서 형식 등)를 바꾸고, 계몽적 접근, 하향식 접근, 전문가적 접근을 통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겪고 있지 않는가? 역설적이게도 2015 개정 취지가 문이과 통합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면 교사들에게 과감히 수업 외적인 일을 줄여주고, 수업연구비를 대폭 지급해주고, 수업 개선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어떨까? 교육과정 개정은 초정권적인 국가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편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교과 영역 구분의 명칭이 다소간 엄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범주 착오의 오류라고 할까. 그리고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통과목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Broudy의 일반공통(common core) 교육과정의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향후 진로나 직업, 학생의 배경과 필요에 관계없이(common), 능력이나 수준에 관계없이(core)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아무 교과나 공통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 그 지위에 올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해석적 용도는 본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전이력과도 관계가 있다.

다른 문제로 편제에서의 핵심적 특징인 1학년의 공통과학과 공통사회의 내용 스코프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이 1학년 수준, 통합 과목이라는 성격에 맞게 그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학년 내용들이 들어온다든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든지, 내용 항목이 증가한다든지 해서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공통과목으로 ‘과학탐구실험(2)’을 포함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사회조사탐구(2)’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균형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탐구영역에서도 개정의 중점처럼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사회탐구영역이 없는 것은 개정의 과정에서 한국사(6)가 기초 영역으로 격상되면서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로 읽힌다.

그리고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수능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진로선택과목의 경우는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일반, 심화)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선택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교-대학과 연계성 차원에서 그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진로집중 과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역시 수능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대학의 입시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다시 진로집중형으로 선택과목의 운영이 회귀할지 모를 일이다.

이하에서는 발표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론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shadow) 사족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제언

첫째, 우선적으로 고교 개정안과 연계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 고교교육의 체제가 대학진학이나 상급학교 시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고교 개정안과 수능과의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언론이나 각종 요구조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것으로서 수능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사전 예고되어야 한다. 반영 비율, 배점, 시험 범위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조기에 결정, 제시되어야 한다. 막 출범한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이과 통합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교원 자격 및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의한 교육과정 실행과 운영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교사양성 체제나 자격 방안에 대하여 개정 방안에 부합되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사양성 대학들은 여전히 분과적인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답적인 교직교육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차제에 교사양성에 대한 교양, 전공, 교직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검토, 무시험 검정의 문제, 양성대학의 통합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을 강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고시보다 상위의 법령으로 범교과 학습주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훼손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교육적인 절차를 거쳐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기준 고시보다 법령적으로 상위의 수준에서 법령으로 학교에 하달되는 공문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것들은 국가 교육과정보다 법령상 상위이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준 교육과정보다 우선하여 실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 장치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안 외에도 보다 다양한 것들을 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3년간에 걸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우선적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교과목 조정과 비중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융합 교과목 등의 수업이 가능한 교원 자격 및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문·이과 통합형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 연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생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평가와 질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하여 실효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강한다.

여덟째, 국가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국가적인 교육기구를 두고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간다.

아홉째, 교육과정 개정이나 평가에서 현장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한다.

열째, 안정적이고 전문적, 실효적인 교육과정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이나 개발에 따른 관련 법령이나 행정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쟁점

첫째, 문·이과 통합형의 명칭과 의미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우이지만(정작 작업 초기부터 줄 곧 문제가 되어온 부분이지만),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개정 연구진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구조사에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개정취지나 개정 절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투영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개정의 슬로건 내지 명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 교과 신설에 따른 교사교육 문제 및 교과서 개발 문제가 남아있다. 사회적,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과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반응이 많으며, 특히 기존의 저학년 통합교과와의 조화로운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학년별 주당 1시간을 증배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지에 대한 문제, 체험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이수시간의 실효성 문제, 새로운 교과서 개발 시간 확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셋째, SW 관련 교육과정 운영 문제, 범교과 학습주제의 시수 배정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분명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범교과 학습주제의 시수 문제를 총론 문서에 제시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보다 감축된 주제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 외에도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수업시수 배정이 제시되어야 하는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총론에 제시하는 방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여부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석·박소영·이정렬·유제순·박일수·이현철·이지은(2014). 학교 현장,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 조사 연구. 교육부.

김경자 외(2014).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총괄). 교육부·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